자동차 · 조선산업 위기극복 나서

전북도, 27일 산업다각화 지원사업 설명회 열어
최대 5000만원 지원 · 군산 소재 위기업종 우선

전북도는 도내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오는 27일 오후 2시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군산 오식도동 소재)에서 '산업다각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산업다각화 지원사업은 군산지역의 한국GM, 군산조선소 폐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다각화를 통해 전북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서 개최하며, 사업전환과 다각화를 준비중인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인증지원 등 세부지원내용과 추진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에서는 사업설명뿐만 아니라 지역 제조업체의 다양한 애로해결과 함께 다각화를 위한 컨설팅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자동차 및 조선, 그리고 연관된 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업다각화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줄 것을 기대하며, 기업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다각화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6월 27일 수요일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기업연구관 2층 중세미나실 201호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와 이후 7월초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 역량 집중"
윤웅걸 전주지검장 취임사에서 강조

윤 웅 걸(52·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전 주 지 검장이 22일 취 임 식 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검찰은 현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장은 "최근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라며 "직접수사는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고 자기편견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를 자제함으로써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사지휘 또는 사법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의 존재 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또 "얼마 전에도 우리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다"면서 "의견의 대립을 이해하기 위해선 나만 옳다는 오만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소방동요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안전문화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열린 '제17회 전라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유치부 및 초등부 10개팀과 학부모 등 총 700여명이 '전북도청 공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22일 열렸다. 사진은 공연을 마친 유치부팀에게 박수를 치는 송하진 도지사와 참석자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61명 추가 선발

도, 내달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서 제출해야

전북도는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61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1차로 176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금을 지원중에 있으며 청년들 사이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 농식품부 정부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사업은 후계농 선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2015년 이후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이다.

단, 사업체를 직접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과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은 7월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합동 '드림팀' 꾸렸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공식 출범

정부가 사회 지도층과 기업들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 및 범죄수익 등을 찾아내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검찰청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구성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초대 단장은 이원석(49·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맡게 됐다. 이 단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이다.

검찰·관세청·국세청
금감원·예보 등 총출동
초대 단장은 이원석 검사
정부과천청사 설치

합동조사단은 1팀과 2팀으로 나눠져 운영된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전문인력이 조사단원으로 참여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설치됐다.

주요 조사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와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빼돌려 숨기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또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수출입 가격 조작 및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와 관련된 횡령·배임 행위도 포함된다.

일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 등 재벌과 기업들의 해외 재산 은닉과 비자금 조성 등이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주목 받았던 최순실씨의 해외 재산 도피 등 범죄 관련 은닉자산도 주요 추적대상이다.

합동조사단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역외탈세와 재산국외도피, 해외 자금세탁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면 징세·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곧바로 나서게 된다. 기관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징세나 형사처벌 등에 이르는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은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은닉이 점점 국제화·지능화되면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과 소득을 감추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 국부유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전문가 도움으로 교묘하게 이뤄지면서 수사기관과 과세기관, 정책결정기관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합동조사단 측은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해외 불법유출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적정 징세가 되도록 하겠다"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